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048
----------	------

발의연월일 : 2025. 2. 11.

발 의 자 : 김선민 · 서왕진 · 김준형
백선희 · 강경숙 · 신장식
윤종균 · 박은정 · 황운하
한창민 · 김재원 · 문진석
차규근 · 박지원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중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수가 적고, 그마저도 연 1~2회 회의를 진행하는 데에 그치는 곳이 많으며, 규모가 큰 교통·주거·복지사업은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 결정되어 장애인복지사업과의 연계에도 어려움이 있음.

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대신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지방에서 실시하는 장애인복지사업의 효과성과 장애인 정책 관련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등).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①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및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59조의11제4항 전단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59조의13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 법에 따른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u> 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① ----- ----- <u>관</u> <u>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u> 의-----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u> 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u> 및 <u>시·도지사는</u> ----- ----- ----- ----- ----- ----- -----.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① <u>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u>	제13조의(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①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및 장애인

<p><u>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u></p> <p>② 제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u>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u></p> <p>② 제1항의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u>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① ~ ③ (생략)</p>	<p>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① -----<u>시·도지사</u>-----</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p>

